

김학의, 다시 유죄...대납 휴대폰비 결정적

1심 “공소시효 만료·직무관련성 없다” 무죄
 2심 “일부 뇌물 공소시효 만료 안돼” 실행
 최모씨에게 받은 대납비 174만원 인정돼
 11년 5월까지 받아 10년 공소시효 안지나

별장 성접대 의혹과 관련, 수억원대 뇌물 수수 혐의로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던 김학의(64·사법연수원 14기) 전 법무부 차관이 항소심에서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

1심이 모든 공소사실에 대해 공소시효 만료와 직무관련성이 없다는 이유로 무죄 판결한 것과 달리 항소심은 일부 뇌물 혐의에 대해 직무관련성이 있다며 공소시효가 만료되지 않았다고 보고 판단을 뒤집었다. 김 전 차관이 대납받은 휴대전화 요금에 법원 판단에 결정적 역할을 했다.

28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1부(부장판사 정준영)는 이날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혐의로 기소된 김 전 차관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1심과 달리 징역 2년6개월에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앞서 1심은 김 전 차관이 2006~2008년 건설업자 윤중천씨로부터 13차례에 걸쳐 성접대를 받고, 총 3100만원 금품 등을 수수한 혐의에 대해 뇌물 수수 금액이 1억원 미만이라서 공소시효 10년이 지났다고 판단했다.

이어 윤씨가 여성 이모씨에게 받은

1억원을 포기하도록 한 제3자뇌물수수 혐의도 증거가 부족하다며 인정하지 않았고, 윤씨 지인의 사건 진행 상황을 알려준 수뢰후부정척사 혐의 역시 부정 청탁 가능성이 입증되지 않았다고 봤다.

그러면서 김 전 차관이 2000년 10월부터 2011년 5월까지 다른 사업가 최모씨로부터 8년간 신용카드를 받고, 명절 떡값으로 상품권 등을 수수하는 방식으로 총 5160여만원 이상의 뇌물을 수수한 혐의도 모두 무죄 혹은 이유 면소 판단했다.

아울러 김 전 차관이 저축은행 회장 김씨로부터 1억5000여만원의 뇌물을 받은 혐의도 5600만원은 직무 관련성 및 대가성을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다고 봤고, 9500만원은 공소시효 10년이 지났다고 봤다.

항소심은 이 중에서 김 전 차관이 윤씨로부터 받은 뇌물과 김씨로부터 받은 뇌물은 모두 1심과 같이 공소시효가 만료되고 직무관련성이 없다는 이유로 무죄 판단했다.

하지만 최씨로부터 받은 뇌물에 대해서는 판단을 달리했다.

1심은 최씨에게 받은 뇌물 중 2000년 10월부터 2009년 5월까지 받은



4700여만원을 인정하면서도 공소시효 10년이 도과했다며 이유 면소 판결했다.

1심은 김 전 차관이 최씨로부터 2009년 추석과 2010년 설날에 각 상품권 100만원씩 수수한 것은 증거 부족으로 무죄, 2009년 6월부터 2011년 5월까지 차명 휴대전화 사용요금 174만원을 대납받은 것은 직무관련성이 없다며 무죄 판단했다.

이 중 항소심은 상품권 수수는 무죄 판단을 유지했지만, 차명 휴대전화 사용요금 174만원 대납에 대해서는 “김 전 차관과 최씨 모두 알선 사안에 대해 구체적 기대감을 갖고 있었다”며 직무관련성을 인정하고 뇌물이 맞다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항소심은 김 전 차관이 최씨로부터 받은 뇌물을 2000년 10월부터 2011년 5월까지로 봤고, 총금액은 4300여만원을 받았다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이는 특가법상 뇌물죄의 포괄일죄에 해당한다고 설명했다.

항소심 판단을 적용하면 공소시효는 김 전 차관이 차명 휴대전화 사용요금을 마지막으로 대납받은 2011년 5월부터 10년이 지난 2021년 5월까지가 된다. 특가법상 뇌물 수수 금액이 3000만원 이상·1억원 미만이면 공소시효가 10년이다.

검찰이 김 전 차관을 기소한 시점이 2019년 6월4일이기 때문에, 이번 항소심 판단에 따르면 공소시효 10년이 도과하지 않게 되는 것이다.

결국 1심에서 인정되지 않았던 174만원의 차명 휴대전화 사용요금 대납이 항소심에서는 김 전 차관의 ‘직무관련성’과 인정된다며 뇌물로 판단됐고,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고 자유의 몸이 됐던 김 전 차관의 발목을 잡게 됐다.

기동취재본부

완도해경, 바닷길 통한 마약거래 근절한다

전남 완도해경이 바닷길을 통해 은밀하게 이뤄지는 마약 거래 등을 집중 단속한다.

완도해양경찰서는 올해 12월31일까지 해양 특성화 마약류 사범 특별단속 속에 나선다고 28일 밝혔다.

이번 단속은 바닷길을 통한 마약류 밀반입이 늘고 있는 데다, 사회관계망 서비스(SNS) 등으로 마약을 손쉽게 접할 수 있게 되면서 높아진 국민 불안감을 해소하기 위해 마련됐다.

완도해경은 수사와·외사계를 중심으로 각 파출소와 협업을 통해 마약류 범죄 단속에 주력한다.

항해 선박 내 선원 음주측정과 함께 마약류 간이시약 검사를 진행한다. 관할구역 내 외국인 선원이 조업을 마치고 입항할 경우에도 마약 투약 여부를 확인한다.

또 무인비행체(드론)를 활용해 마약류 재배·거래 등 동향을 파악한다.

항정신성 약물, 양귀비, 대마 등 마약류를 수출입하거나 매매 또는 매매하다 적발되면,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마약류 식물을 허가 없이 재배할 경우에도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형 처벌을 받는다.

완도해경 관계자는 “국민 안전과 건강한 사회문화 정착을 위해 마약류 범죄 특별 단속에 나선다. 마약류 공급을 원천 차단하고 마약류 유통사범에 대해서는 엄정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화순서 벗짚 태우던 80대 숨진 채 발견

27일 낮 12시57분께 전남 화순군 이서면 한 논에서 불이 나 소방당국에 의해 24분 만에 꺼졌다.

화재 현장에서는 주민 A(83)씨가 숨진 채 발견됐다.

경찰은 A씨가 홀로 벗짚을 태우던 중 번진 불길을 미처 피하지 못한 것이 아닌가 보고 정확한 화재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숙박업소 객실 침입한 괴한 달아나...경찰 추적

투숙객이 자고 있던 숙박업소 객실에 괴한이 침입했다가 달아나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28일 광주 서부경찰서에 따르면 이날 오전 5시50분께 광주 서구 농성동 숙박업소 한 객실에 신원을 알 수 없는 남성이 침입했다.

한참을 복도를 서성하던 이 남성은 객실 문을 열고 들어갔으나, 투숙객이 인기척에 놀라 깨자 도주했다.

경찰은 60대로 추정되는 이 남성이 절도 행각을 벌이려다 도주한 것으로 보고 행방을 쫓고 있다.

여수해경, 안전불감증 어선 잇따라 적발

전남 여수해양경찰서는 안전불감증에 빠진 상태로 해상에서 조업한 어선을 잇따라 적발했다고 28일 밝혔다.

여수해경에 따르면 지난 27일 고흥군 봉래면 인근 해상에서 조업 중이던 고흥선적 어선 A 호(16)의 선장 B (52) 씨를 선박직원법 위반으로 적발했다.

B 씨는 해기사 면허를 받지 않고 A 호를 운항한 혐의를 받고 있다. 여수해경은 10월 한 달간 총 4건의 해기사 미 승선 운항을 적발했다.

해경은 앞서 13일 고흥군 도화면 인근 해상에서 조업 중이던 고흥선적 C 호(8.55)의 소유자 D(49) 씨를 어선법 위반으로 적발했다.

D 씨는 어선 검사증서 상의 최대승선인원을 초과 승선한 상태에서 운항한 혐의를 받는다.

여수해경 관계자는 “입출항 신고 없이 수시로 조업을 나가는 양식장 관리 등에서 안전저해사건이 끊이지 않고 발생하고 있다”며 “안전은 모든 바다가족이 지켜야 할 가장 중요한 약속이므로 반드시 지켜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여수해경은 ‘2020년 하반기 해양안전 저해 사범 특별단속 계획’에 따라 해상에 형사기동정 등을 배치해 단속하고 있다.

광주 학교 급식실 조리원 감원 문제 타결

시교육청·학비노, 12명서 3명 감원 최종 합의

학교 급식실 조리원 감원 문제를 놓고 평행선을 달리던 광주시교육청과 전국학교비정규직노동조합 광주지부(이하 학비노 광주지부)가 손을 맞잡았다.

28일 광주시교육청과 학비노 광주지부에 따르면 내년도 급식실 조리원 감원 인원을 12명에서 3명으로 축소하는 데 양측이 합의했다.

광주 지역 학교 급식실에서 근무하는 조리원은 단설 유치원과 특수학교, 초·중·고 포함 1235명이다.

이 중 37명이 퇴직을 앞두고 있다.

앞서 시교육청은 퇴직 조리원 수만큼 아닌 25명만 신규 채용하겠다는 방침을 세웠다.

사실상 내년도 정원이 12명 줄어드는 셈이다.

매년 학생 수가 큰 폭으로 감소하는 데 따른 교육지책이라는 설명이 있었다.

반면 학비노 광주지부는 조리원 현원 유지를 강력히 주장하며 시교육청사 현관 앞에서 16일 동안 노숙

농성을 벌이기도 했다.

평소에도 업무가 과중인데 코로나 19까지 겹치면서 해야 할 일이 더 늘어났다는 것이다.

학년별 시차배식과 철저한 방역 상황에 따른 업무량 및 근무시간 증가, 휴게 시간 부족 등 코로나19가 업무량을 배가시키고 있다는 주장이다.

시교육청과 학비노 광주지부는 또 조리원 노동 강도 완화를 위한



김치 완제품 사용, 교사를 위한 자율배식대 감소 방안 등에 대해 계속 협의해 나가기로 했다.

광주 지역 일부 학교에서는 매월 김치를 직접 담급 배식하기도 했다.

오유나기자

서버구축 및 운영

홈페이지 제작, 인터넷신문, 쇼핑몰 제작

준솔루션

문의 : junsol@junsol.com